

과학기술 60년 야사

이승만 · 박정희 전대통령의 과학사랑

07

글_현원복 과학칼럼니스트 hyunwb@kornet.net

우 리 나라 초대대통령 이승만은 카리스마를 앞세운 ‘가부장적 권위주의형’ 지도자로 각인되어 장기집권과 부정선거에 이은 퇴진과 망명으로 마감된 그의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 대통령평가위원회는 이승만 전대통령의 도덕성은 높지 않으나 교육과학 업적 평가에서는 역대 대통령 중 최하위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반세기에 가까운 우리 나라 원자력 개발사에서 초창기에 보여 준 그의 과학 리더십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다. 1950년대 중반 매우 어려웠던 우리 나라 형편에도 불구하고 국가원수가 초창기의 원자력 개발을 위해 과감한 결단과 추진력으로 탄탄한 터전을 닦는데 중요한 버팀목 구실을 한 것이다.

원자력 개발 터전 대통령 직속 ‘원자력원’ 설립

이승만 전대통령이 원자력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특별히 이공계 분야 학과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만한 계기는 없었다. 1905년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한 이승만 전대통령이 공부한 과목은 논리학, 영어, 미국역사, 프랑스어, 철학, 경제학, 사회학, 서양사, 천문학, 고대 어학 등이었다. 1907년 6월 조지 워싱턴 대학 학부를 졸업한 이승만은 1907년 가을학기에 하버드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국제법과 중재론 및 미국외교 정책을 연구하여 1908년 하버드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어 1908년 가을에는 프린스턴 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여 국제법, 외교학을 연구하여 1910년 국제법에 관한 논문 ‘미국의 영

향을 받은 국제법상의 중립’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미국에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무역의 권위자로 인정받기도

연합포토



원자력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원자로 기공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

했다. 그가 대학에서 관심을 갖고 청강한 이공계 분야 과목은 천문학뿐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치에 매우 해박한 안목을 갖고 있던 그는 전후의 새로운 원자력 시대를 맞아 원자력이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 무렵 국내사정은 매우 어려웠다. 우리 나라 정부는 1958년도에 미국측에 대해 모두 3억 9천만 달러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대한 방위원조(경제원조)로 2억1천500만 달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원조도 국내 생산물자보다는 일본에서 생산하는 물자를 구입하여 제공했으며, 구입대금도 일본에는 달러로 지불하면서 한국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구입대금은 한화로 지불했다. 미국의 기본전략은 공업화된 일본을 미국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경제적 후진국인 한국을 일본에 의존하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이런저런 문제는 원자력 이용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북돋우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만 전대통령은 원자력사업에 관한 모든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무부, 재무부, 국방부, 문교부 장관으로 구성된 5부 장관회의에서 협의 결정하고 문교부 장관이 책임지고 수행하게 하였다.

1958년 2월 22일 국회를 통과한 원자력법은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원자력원을 두고 원자력 원장은 국무위원급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승만 전대통령은 원자력 원장 선임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기구를 이끌어 나갈 인물로서는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원자력원이 설립되자 매스미디어들은 하마평에 오른 원장 후보자들의 이름을 연일 보도했으나 좀처럼 발령이 나지 않았다. 당시 신문들이 물망에 올린 원장 후보들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자들(李源喆, 安東赫, 金東一, 崔奎南)이었다. 그러나 이런 예측은 모두 빛나가 버렸다.

이승만 전대통령은 장고 끝에 마침내 1959년 1월 21일 원자력원 초대 원장으로 뜻밖에도 김법린(金法麟)을 임명했다. 문교부장관과 집권 자유당 원내총무를 지낸 거물급 인사인 김법린을 임명한 것은 이승만이 원자력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었다. 프랑스에서 철학을 공부한 뒤 귀국하여 문교부 장관과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낸 자유당 거물인 김법린은 이승만 전대통령이 가장 신임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

다. 이승만 전대통령이 이런 학계와 정치계의 ‘거물급’ 인사를 원자력 원장으로 임명한 배경에 대해 그가 우리 나라 원자력사업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문교부는 1958년에 이미 새 해에 발족할 원자력원 예산으로 많은 액수를 확보해 놓았다. 이 밖에도 1958년도 예산에 실험용 원자로 구입비로 이미 3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었다. 당시 중앙공업연구소의 예산이 고작 2천만 원 정도인데 비해 원자력원의 예산은 14억 원이었다.

원자력개발 핵심연구인력 해외 파견

이승만 전대통령은 그가 그토록 아끼던 외화를 풀어 많은 젊은 과학도들을 선진국으로 파견하여 원자력개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문 인력을 양성했다. 1955년부터 문교부 원자력과 시대를 거쳐 1964년까지 해외에 파견된 원자력관련 요원은 모두 237명이었다. 특히 1959년 2월 원자력연구소가 설립될 때까지 짧은 기간내에 127명의 훈련생을 국비로 해외에 파견했다는 것은 당시 우리 정부의 외화사정으로서 대통령에 적극적인 이해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서 ‘매우 획기적이고 대단히 야심적인 조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당시 외화사정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하는 것은 외무부 장관이 해외출장에서 비용을 아껴 남은 돈을 국고에 반납했다는 에피소드만으로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승만 전대통령이 외환관리를 위해 얼마나 짜고 엄격했는가 하는 것은 그가 가장 아끼던 인물이던 당시 임병직 UN 대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서신을 통해서도 어렵할 수 있다.

“임병직 대사에게 : 귀하가 보낸 2월분 재정지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첫째, 급료에서 예산허용한도는 \$1,275.00 인데 \$1,967.00을 지출한데 대해 본인은 이해할 수 없다. 대형 업자에 지불한 \$200을 제하고도 \$492이나 초과 지불했다. 둘째, 사무실 임대료 예산은 \$550.00 이었으나 \$576.82를 지출하여 \$26.82를 과지출했다. 셋째, 택시비 예산 책정액은 \$150.00이었으나 \$187.85를 지출하여 \$37.85 과지출 했다. 넷째, 전화 및 전보료는 \$75.00를 배정했으나 \$137.01를 지출하여 \$62.01를 과지출 했다.

(중략) 본인은 위와 같이 과지출한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임 대

사는 7개 분야에 걸쳐 총 \$1,004.41을 과지출했다. 임 대사가 외무 장관으로 있을 때 해외파견 대표는 누구든지 정부를 당황하게 만드는 어떤 부채나 일이 발생하지 않기로 서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중략) 임 대사는 세금을 제외하고 \$1,550를 받고 있는데 과지출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임 대사는 (우리 정부에서) 가장 고액의 봉급을 받는 사람이다. 결손을 지불해 주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통고한다(1956년 10월 17일 이승만 대통령 서한, 대한민국사 자료집 35, 이승만 관계 서한자료집 8(1956), 국사편찬위원회)

이승만 전대통령은 외화절약에 관한 한 그가 특별히 신임하는 임명직 대사의 활동비 지출까지 꼬치꼬치 챙길 만큼 철저했으나 당시의 정부 형편으로서는 지나칠 만큼 막대한 외화를 아낌없이 풀어 많은 젊은 과학도들을 국비로 해외에 내보냈으며 1959년 원자력원이 발족할 무렵 이미 해외연수를 떠난 과학도는 150명에 이르렀다. 그는 젊은 과학자들이 경무대를 방문하여 출국인사를 했을 때 손수 연수생들에게 그렇게 아끼던 외화(달러)를 쥐어 주며 “자네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우리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하네”라고 당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박 전대통령, 수시로 연구소 방문 사기 높여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 등의 주인공인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대통령 평가위원회는 역대 대통령의 도덕성 자질평가에서 그의 도덕성을 노태우, 전두환 전대통령과 함께 최하위권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업적분야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 경제와 교육,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다른 대통령보다 크게 앞선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후진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은 국가원수가 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어렵다”는 데디에(Stevan Dedijer)의 주장 ‘박정희의 과학사랑’에서 그 진가를 찾아 볼 수 있다.

8.15 광복 후 불과 100여 명의 과학기술인력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는 6.25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초라하게 처질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우리 사회를 휩쓴 정치바람과 경제제일주의 앞에서 과학기술이 일어 설 수 있는 풍토는 가꾸기 어려

웠다. 이런 삭막했던 분위기에서 이 땅에서 과학기술이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박 전대통령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컨대 그는 1965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설립된 이래 3년 동안 적어도 한 달에 두어 번씩은 꼭 연구소를 방문,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어 연구소의 사회적 위상을 높여 주었고, 건설현장에 직접 나와 인부들에게 금일봉을 주는 등 각별한 신경을 써주었다. 더욱이 장관들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

국가원수가 자주 연구소에 들른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크게 번거로운 일도 아니고 또 돈이 드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최형섭 초대 KIST 소장은 이런 일이 미치는 영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기술계 전반에 확산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사람의 사기가 극도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연구소를 지원하는 정부 관리의 사고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최 소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두 가지 당부했다. 그 중의 하나는 KIST의 예산을 얻으려고 경제기획원에 들락거리지 말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절대로 인사 청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런 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직접 자신에게 말하라고까지 했다. 아니나 다를까 소장으로 부임한 뒤 얼마 안 되어서 그에게는 당시의 권력층으로부터 사람을 써 달라는 부탁이 한 보따리나 들어왔으나 대통령의 지시대로 한 건의 청탁도 들어 주지 않았다. 인사 청탁뿐만 아니라 대형 컴퓨터를 비롯한 고급 장비의 납품의뢰와 기금을 특정은행에 예금해 달라는 청탁도 들어 왔으나 KIST는 대통령의 강력한 방패 아래 자칫 외부의 영향력에 밀리기 쉬운 초창기의 자율성을 지키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KIST는 1966년 12월부터 도입할 컴퓨터의 기종을 ‘컨트롤 데이터 3300’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바록스라는 회사가 청와대에 줄을 대고 당대의 막강한 위치에 있던 청와대 L비서실장을 통해 바록스 컴퓨터를 채택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했다. 당시 KIST 행정담당 부소장이던 신용균 씨는 KIST의 기본철학이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가 KIST의 컴퓨터 기종을 결정하는 것까지 압력을 넣기 시작한다면 참으로 곤란할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L실장과 매일 만난다는 이치익 예비역 장군을 통해 L실장에게 전하는 장문의 편지를 썼다. KIST의 창립취지로부터 시



KIST 기공식

작하여 컴퓨터기종을 CDC 3300으로 정하게 된 경위, 바록스와 IBM, 그리고 CDC의 같은 성능의 컴퓨터의 가격표와 성능의 비교표 등 자세히 적어서 보냈는데 그 뒤로는 L실장으로부터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한다.

KIST 초창기 자율성 확보 위한 강력한 '방패'

KIST는 1966년 정부로부터 3억 원의 기금을 받았다. 그날 아침 신용균 부소장에게 당시 공화당 재정 담당위원장이던 K씨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K위원장은 KIST 기금으로 나간 돈을 자기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금해 주면 당으로서의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은행에 예금을 유치해 주면 은행으로부터 상당한 사례금을 받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다. 3억 원은 당시 화폐가치로서는 매우 큰 돈이었다.

K위원장은 당시 정계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KIST의 자율성을 생각할 때 정당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한다면 연구소의 장래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K위원장에게 “우리 연구소는 정치와는 관계가 없는 순수한 공업계를 위한 연구만 하는 곳이니 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K위원장은 신 부소장의 이런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 기금을 지정은행에 넣어 달라고 했다. 그러나 신 부소장이 계속 곤란하다고 하니 수화기를 내던진 모양이어서 수화기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런 무례한 대접을 받은 신 부소장은 기분이 몹시 상했다. 그 날 신 부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최 소장은 껄껄대고 웃으면서 “야! 너도 대단한 놈이다”고 했다.(주: 최형섭 소장과 신용균 부소장은 대전중학교 동기동창생이었다)

사실 신 부소장이 K위원장과 같은 당대 정계의 거물의 청을 한 마디로 거절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신용균은 K위원장과 여러 번 서울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함께 친 일도 있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청을 거절당하니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일이 있는 뒤 서로 만나도 서먹서먹했고 인사도 하지 않았다. 당시 K위원장 정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의 청을 감히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난 뒤 K위원장이 KIST의 성격을 알았는지 서로 만나면 악수도 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KIST의 건물을 착공하고 다음 해 예산을 신청한 뒤 얼마 안 되어 최 소장은 김학렬 경제기획원 차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KIST가 다음 회계 연도 예산으로 10억 원을 신청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2억 원을 삭감하여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겠으니 양해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예산문제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김 차관에게 내가 이러쿵저러쿵 해보야 소용없는 일이지만 우리로서는 삭감된 만큼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그 점은 알아서 하시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며칠 후 KIST는 박 대통령의 도움으로 청구한 예산을 단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었다.

당시 내각에서 예산조정이 끝나면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것이 관례였다. 김 차관이 대통령에게 브리핑을 끝내고 보고가 최종단계로 들어갔을 때 대통령이 물었다.

“김 차관! KIST의 예산이 얼마라고 했던가?”

“8억 원입니다.”

“당초 KIST가 신청한 액수는 얼마였던가?”

“10억 원이었지만 KIST소장과 의논해서 별 탈 없이 8억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김 차관은 KIST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구구하게 늘어놓았다. 그러나 박정희 전대통령은 한마디로 “김차관! KIST 예산을 다시 10억 원으로 올려!”라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이런 일이 있는 뒤부터 경제기획원은 KIST가 신청한 예산을 깎는 일이 없었으며 요청한 액수를 그대로 받아 주었다. ㉮



글쓴이는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후, 미국 뉴욕시 컬럼비아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고급과학보도과정을 수료했다. 세계통신사 외신부 기자, 동화통신사 외신부 차장을 거쳐 서울신문 논설위원을 지냈으며,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에서 '과학보도론' 강의를 지냈다.